친일청산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방학진

요즘 영화 〈실미도〉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아마도 이 영화 한 편으로 앞으로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해 한국 영화인들은 당분간 안심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전문 영화평론가에서부터 나 같은 문외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꼽는 이 영화의 성공요인 중에 하나는 '분단 현실에 놓인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 이다. 더 나아가 혹자는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헐리우드 영화가 감히 흉내나 감정이입조차 못할 만큼의 쓰라린 현대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이 역설적으로 무궁무진한 영화의 소재라고 말한다. 실제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제작한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실은 칼럼에서 은폐된 한국 현대사를 영화가 외롭게 파헤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과거사를 해결하는 작업에 다른 분야에서도 분발해야 함을 꼬집었다.

"결국 한국 영화는 한국의 현대사를 '극화' 함으로써, 원래 영화라는 매체의 가공할 대중적 선동력에 근거하면서 또한 작금의

놀라운 영향력으로 사회적 파장과 함께 '쟁점'을 만들어 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들을 함께 또는 다르게 만들어야 할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그것이 아쉽다. '쟁점'에도 '시각의 균형'이 필요할 터이다." (한겨레 2004년 1월 29일)

영화 개봉 이후 몇몇 북파 공작원 출신들은 영화의 훈련 장면이 실제보다 덜 가혹하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항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녕 그들의 항의를 들어야 할 곳은 영화제작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존재인정과 명예회복에 소극적이었던 정보기관과 반공, 냉전, 지역주의의 그늘에서 기생하는 정치모리배들이 아닐까.

영화 〈실미도〉가 한국 영화 흥행의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을 때, 인터넷 공간에서도 역시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친일인명사전〉 편찬, 네티즌의 힘으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단 11일간 각본도 없이 네티즌 스스로 연출하고 주연까지 맡아 대박을 이룬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는 예기치 못한 카메오들의 등장으로 더욱 성공을 거두었다. 그 카메오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이름을 밝혀보면, 먼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위해 정부 예산안보다 무려 8천억 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시골 개울에 다리 하나 짓는 비용도 안 되는 2004년도분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국회 예결소위 의원들이다.

그 다음은 새해 벽두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방문한 고이즈미 수상과 독도 우표에 항의하며 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치인들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안에 반대한 행정부 일부 관료들이다. 그들은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은 우려하면서 정작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반발은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 밖에도 인천 부평 땅을 되찾겠다는 매국노 송병준의 후손과 입만 열

면 '민족지' 운운하면서도 정작 이번 네티즌 모금에 딴지를 건 동아일보와 침묵으로 일관하며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 준 조선일보 등도 빼놓을 수 없는 흥행의 카메오들이었다.

그러면 초유의 네티즌 성금 모금과정의 뒷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자.

먼저 이번 모금의 대전제인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자. 1966년 『친일문학론』의 저자인 재야 사학자 임종국 선생께서 1989년 타계 후 몇몇 재야 인사들이 그분의 작업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뒤틀리고 불의로 가득 찬 민족사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1991년 〈반민족문제연구소〉를 개소하였다. 연구소는 그 후 임종국 선생이 구상하시던 〈친일파 총서〉를 〈친일인명사전〉 편찬으로 구체화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급격히 성장한 시민의식에 기대어 역사청산 작업의 하나인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국민모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 노동, 여성, 농민, 환경, 언론, 문화 운동 등 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사 청산 운동은 사회적 담론으로 그 입지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은 문민 정부—국민의 정부—참여 정부로 이어지면서 나름대로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는 형성되고 있었다. 문민정부 시절 하나회의 해체와 전 · 노의 기소, 조선총독부건물 해체와 국민학교 명칭 변경, 국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인권위, 의문사진상규명위 등의 설치, 언론자유 확대 등이 이루지면서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에 대한 접근이 여기 저기에서 활력을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기념관 반대, 안티조선 운동 등은 친일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대 변화 속에서 친일역사 청산과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

면서 다행히도 김원웅, 김희선, 서상섭, 설 훈, 송영길, 안영근, 이재정, 이창복, 임종석 의원 등 재야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 처음으로 2002년도부터 〈친일인명사전〉 예산 2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소에서는 1999년 교수 1만 명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지지 서명과 함께 이만열 교수(현 국사편찬위원장) 등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분들로 이뤄진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2002년도에는 『일제시대 통치단체 및 협력단체 편람』(중앙편), 2003년도에는 『중국 관내와 만주지역 친일단체 편람』을 연이어 내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2004년도에는 『일제시대 통치단체 및 협력단체 편람』(지방편)을 준비중이었으나 그만 예산 삭감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예산 삭감에 대해 몇몇 언론은 그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역시 국회에서는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었고, 친일문제 연구에 조예가 깊은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칼럼을 통해 예산 삭감에 이어 법 통과마저 순탄치 않음을 개탄했다. 그 칼럼에 어느 네티즌이 국민모금을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이때가 1월 7일이었다. 게시판의 글을 본 정운현 국장은 필자와 이에 대해 통화를 했고, 필자는 곧바로 〈오마이뉴스〉를 찾아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8일 오전 급하게 통장을 개설하고 오후 2시 양측 대표 간의 조인식과 함께 오후 4시 30분에 이 사실을 기사화하여 〈오마이뉴스〉를 통해 1신이 올라갔다. 흔히 영화배우들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개봉관 앞을 몰래 기웃거리며 영화 관람객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핀다고 한다. 1신이 올라간 이후 필자의 심정도 아마 배우들의 그것과 비슷했을 것이다. 조인식에서 합의한 대로 '3월 1일까지 1억원, 8월 15일까지 5억 원 모금'이 가능할까

무척 노심초사했다. 사실 3 · 1절과 8 · 15를 기점으로 삼은 것도 모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날을 통해 모금 운동에 관심을 높이자는 의도였다. 필자는 만약 이 모금 운동이 실패한다면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수구 언론들이 기다렸다는듯이 "그것 봐라.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이제 친일청산은 집어쳐라"고 할 상황이 너무도 실감나게 다가왔다. 그러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네티즌의 폭발적인 접속으로 〈오마이뉴스〉가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 반대한 의원들을 조롱하는 플래시와 동영상, 만평 등이 만들어지고, 독립기념관 사이트에서 퍼온 '압록강 행진곡'이 유행하면서 핸드폰 컬러링으로 등장하기도 했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서버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기증하는 회사도 있었다. 한편, 성금을 낸 사연들이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모금 운동은 감동마저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현재도 성금은 계속 이어져 벌써 7억 원이 넘어섰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일일호프나 거리모금마저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독소조항도 이번 모금을 계기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권과 반역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눈과 귀가 가려져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숨겨진 진실에 대해 그토록 목말라했던 우리들에게 영화 〈실미도〉가 진실의 한 가닥을 보여 주었다면 2006년도에 완성될 〈친일인명사전〉은 거짓과 불의가 무엇이었고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

방학진 vacationjin@lycos.co.kr |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